

‘나, 괜찮은 시민인 줄 알았는데.....’

- 재난사고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 인권교육센터 들, ‘괜찮은줄...’ 모임

작성: 2014.10.15.

## □ 우리는 왜 질문하는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사고 자체’의 충격뿐 아니라 ‘사고 이후’에 일어난 일들로 우리에게 수많은 고민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규제 개혁’ 또는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줄줄이 사라지고 있는 조건에서 누가 참사의 희생양이 되느냐는 미시적 우연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거시적 필연의 문제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어느 특별한 누군가의 우연한 불행이 아니라, 안전을 독점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었던 아무개들의 죽음이었기에 더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한편, 우리는 이 구조적 불행 앞에 피해자들의 아픔과 시민들이 함께 겪은 상실을 온전히 애도하는 일, 그리고 우리 사회가 예비하고 있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내는 일 역시도 많은 준비됨이 필요한 일임을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나와 이웃들의 삶에 뜻밖에 찾아온, 그러나 이미 예고되어 있던 사고를 대하는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한 공동체의 역량은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그 역량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인권감수성입니다. 그래서 ‘인권교육센터 들’에서는 세월호 이후 일어난 일들과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함께 살피며 ‘괜찮은 시민’이 되기 위해 우리가 던져보았으면 하는 질문의 목록들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이 질문의 목록들은 더 많은 시민의 경험과 지혜들이 모여 보완되어야 할 미완의 버전입니다. 무엇보다 세월호 사건 자체가 현재 진행형이기에 새로운 질문거리들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수정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질문의 목록에 대한 제안을 언제나 기다립니다.

\* ‘인권교육센터 들’에서는 우리 안의 인권감수성을 돋우기 위하여 사건이나 관계를 되돌아보는 데 필요한 질문의 목록들을 찾아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결과물이 재난사고를 대하는 시민의 자세를 점검하기 위한 질문목록 편입니다.

## □ 어떤 질문들이 필요한가

### 1. 사건의 당사자성(주로 피해자 구성)에 대하여

- 1-1) 사건의 '피해 당사자'는 누구인가? : 직접적 피해자와 시민
- 1-2) 사회적 애도와 피해자 지원의 과정에서 피해자 내부에 차별 혹은 위계가 발생하지는 않는가? : 피해의 위계화
- 1-3) 애도의 방향과 형식이 피해자를 대상화하거나 피해자의 위치를 특정하게 고정하지는 않는가? : 피해자의 대상화
- 1-4) 사고 대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수렴되고 있는가? 예방과 보호의 내용이 강요되지는 않는가? : 대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의 위치

### 2. 사회적 애도의 내용과 형식에 대하여

- 2-1) 애도란 무엇인가, 애도는 그저 슬퍼함인가? : 행동하는 애도
- 2-2) 애도의 표현 방식, 기간, 대상에 대한 강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 억압받는 어떤 애도
- 2-3) 누구의 어떤 애도가 위로가 될 수 있는가? : 서성이는 애도와 넘치는 애도 사이
- 2-4) 누가 애도할 수 있는가? 애도의 능력과 시간을 허락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가? : 애도로부터 회피하기/거리두기의 사회적 맥락
- 2-5) '~주의' 또는 사회적 각본에 따라 애도를 포장하지는 않는가? : 포섭된 애도

### 3. 사건의 의미와 해결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 3-1) 누가 왜 무슨 일을 겪었는가? : 사고의 원인에 대한 성찰
- 3-2) 사고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차별적 인식이 작용하진 않는가 : 잘못 겨냥된 화살
- 3-3) 사건이 잘 '해결'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 해결의 의미

### 4. 언론과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 4-1) 정부는 재난현장과 피해자에 국가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 정부의 역할
- 4-2) 정부가 진실을 통제하려 하진 않는가? : 진실의 통제
- 4-3) 정부가 시민의 정서를 통제하려 하진 않는가? : 여론의 통제
- 4-4) 실효성 있는 재난 대비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가? : 대책의 방향
- 4-5) 언론은 어쩌다 '기레기'가 되는가? : 언론의 재난보도 원칙

## □ 이 질문들은 왜 필요한가

### 1. 사건의 당사자성(주로 피해자 구성)에 대하여

#### 1-1) 사건의 '피해 당사자'는 누구인가? : 직접적 피해자와 시민

✓ 재난사고에서 피해 당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사망자? 실종자? 생존자? 그들의 가족들만 당사자일까요? 그 밖의 사람들도 당사자에 포함될 수 있다면 어떤 이유로, 어떤 위치로 포함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세월호에 승선한 승객이다.' 이 문장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 누구도 쉽게 직접적 피해 당사자들의 고통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다거나 그들과 나는 같은 처지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겁니다. 피해 당사자들이 사고 이후 향방을 좌우하는 결정적 열쇠를 쥐게 되는 위치에 놓이는 것도 필연적입니다.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개인적 보상 차원에서 사고가 묻힐 수도 있고 사고를 낳은 구조적 원인을 사회가 함께 뿌리 뽑는 변화의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가 나의 삶과 연루되어 있음을 발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고를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이런 참혹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과 공동체의 상실로 받아들이는 시민들도 있는 것이지요. 거대한 고통 앞에 마주 선 이웃에 대한 연민을 넘어 '사회적 애도'가 일어난 이유입니다. 사고의 당사자성이 이렇게 확장될 때, 시민들은 피해 당사자 혹은 유가족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고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까요? 자신도 당사자임을 느끼는 시민들이 자기 위치에서 애도를 표하고 연대할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참여하든, 사고를 잉태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자신도 당사자임을 확인하는 시민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재난사고로부터 좀 더 안전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방안을 궁리하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사고의 축소나 은폐는 어려워질 테니까요.

#### 1-2) 사회적 애도와 피해자 지원의 과정에서 피해자 내부에 차별 혹은 위계가 발생하지는 않는가? : 피해의 위계화

✓ 우리가 가진 알팍한 잣대로 누군가의 고통을 함부로 평가하고 순위를 부여하는 일이 일어나진 않나요? 같은 사고의 피해자임에도 그 피해가 두드러지거나 기억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사소하게 여겨지거나 잊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도 초기부터 학생 피해자에게는 관심이 집중됐던 반면, 일반인과 비정규직 노동자로 승선했던 이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삶의 기반이 세월호와 함께 모조리 침몰해버린 생존자들은 학생 사망자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피해자라는 명함도 내밀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피해자 중 누군가는 특별한 주목을 받고 누군가는 소외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 이유는 과연 정당한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죽은 사람도 있는데 생존자가 무슨?' '살아남은 것만으로 감사해라.' 등의 반응에서도 볼 수 있듯, 생존자들 역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의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거나 생활고로 힘들어할 수 있는데, 그들의 아픔에 대한 충분한 숙고나 그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 ‘꽃다운 죽음’이 따로 있다거나 ‘엄마-아빠-자녀로 구성된 단란한 가정이 파괴되어 더 안타깝다’는 반응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사고의 원인과 피해자의 고통을 깊이 헤아리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죽음이나 고통에 사회적 차별이 미친 영향을 분석해보아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사회에서 갖는 위치와 사고와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은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이를테면 사고의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었을 때 그 피해의 원인을 적극 부각하고 사회적 성찰을 촉구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이는 죽음을 차별적으로 대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애초 가지고 있던 ‘권력’이나 ‘소수성’에 따라 피해를 구분 짓고 위아래를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죽음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학생 피해자에게는 사회적 애도가 집중되거나 비정규직 승무원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현상이 대표적입니다. 평등한 애도가 무너지는 순간, 소외되는 피해자가 생겨남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 1-3) 애도의 방향과 형식이 피해자를 대상화하거나 피해자의 위치를 특정하게 고정하지는 않는가? : 피해자의 대상화

√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이와 같은 애도의 방식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사고의 발생에 나도 책임이 있을 수 있음을 발견하는 것과 보호자(구원자)를 자처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월호 사고 이후 "아이들아 미안하다.", "우리가 진실을 밝혀줄게.", "침몰한 나라, 어른들이 건져낼게." 등과 같은 말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절대다수가 학생이고, 개인여행이 아닌 수학여행이라는 공적 교육과정 속에서 벌어진 참사라는 점 때문에 피해자의 대표 자격으로 청소년('아이들')이 불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청소년은 '어른'들의 구조를 받지 못한 무력한 피해자 또는 일방적 보호의 대상으로서의 위치를 갖게 됩니다. 반면 '어른'들은 진실과 정의의 구원자로서의 위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에게 반말로 애도를 표현하는 일이 쉬웠는지도 모릅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정서는 피해자가 어린이·청소년일 때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미안해야 할 것은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함'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이런 대형참사가 예비되고 있는데도 알아차리고 대처하지 못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피해자를 ‘피해자다움’ 또는 ‘정상성’이라는 사회적 편견에 가둔 채로 애도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순수 유가족’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정치적 맥락 속에서 일어난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비정치성을 강요하고, 구조적 해결을 모색할 때 애도를 철회해버리는 것은 타당한 일일까요? 피해자나 유가족의 개인사를 헤집거나 가족형태(이혼가정, 한부모 가정 등), 일부 피해자의 행동 등을 문제 삼아 애도를

경감 또는 철회할 명분으로 삼지는 않나요?

1-4) 사고 대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수렴되고 있는가? 예방과 보호의 내용이 강요되지는 않는가? : 대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의 위치

✓ 예방대책 수립 등 사고 직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나요? 대책으로부터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목소리, 시민의 목소리는 소외된 채 일부 권력자들의 목소리만 반영되고 있지는 않나요? 유사 피해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특정 집단의 권리를 제약하는 폭력적 대책이 강요되거나 시민들 스스로 권리를 반납해버리지는 않나요?

✓ 세월호 사고 이후 학생 안전을 이유로 수학여행 전면 금지 조치 등 일방적 규제가 강화된 적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애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자진해서 연기 또는 포기하는 것과 일방적 금지 통보를 내리는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사고 예방 대책이 정부에게 독점될 때, 보호의 형식과 내용이 당사자가 아닌 타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될 때 우리에게서 ‘안전할 권리’는 더더욱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2. 사회적 애도의 내용과 형식에 대하여

2-1) 애도란 무엇인가, 애도는 그저 슬퍼함인가? : 행동하는 애도

✓ 애도(哀悼)는 흔히 망자에 대해 슬픔을 표현하는 일로 해석됩니다.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애도는 죽음 이외의 ‘(어떤) 상실을 슬퍼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이와 의 이별, 좌절된 기대, 꺾어버린 이상도 상실일 수 있고 애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도의 방식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애도는 그저 슬퍼하기와 같은 정적(靜的)인 행위일 수도, 상실의 원인을 파헤치고 잘못을 바로잡는 동적(動的)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애도는 단지 슬픔을 표현하는 일을 넘어 상실을 어떻게 의미화하고 기억할 것인지를 묻고 아픔을 삶 속에 통합하면서 다시 살아갈 길을 모색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고 이후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들은 애도의 내용과 형식을 ‘조용히 슬퍼함’에 묶어두려는 태도를 주로 보여왔습니다. 분향소로의 추모 행렬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도 정부의 답을 듣고자 하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발걸음은 제지하는 태도가 대표적입니다. 엄숙하고 비통한 분위기로 슬퍼하는 일 말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 ‘애도는 동사(動詞)다.’ 행동하는 애도를 제약하고, 애도를 그저 슬픔에 묶어둠

**로써 사라지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사고의 진실을 파헤침으로써 우리는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책임을 다할 기회, 사고의 의미를 성찰하고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를 함께 모색하는 기회, 개인적 애도와 사회적 애도가 충분히 일어나고 '사고 이전과는 다른 사회, 다른 타인과의 관계'에서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슬픔에만 머무를 때 온전한 애도는 불가능할 테니까요.

## 2-2) 애도의 표현 방식, 기간, 대상에 대한 강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 억압받는 어떤 애도

✓ **애도는 슬픔, 비장함, 침통함, 엄숙함으로만 표현되어야 할까요?** 노래와 웃음을 동반하면서도 애도의 과정을 통과하는 일은 곧장 비난받아야 하는 행위일까요? 세월호 사고 직후 사회 전체가 충격과 비통함에 휩싸이면서 예정되어 있던 많은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축제'라는 이름을 띤 행사가 개최되자 따가운 눈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실과 대면하면서도, 충격적 사고에서 살아남아 일상과 다시 마주하면서도 사람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상처를 마주하고 회복의 시간을 가집니다. '피해자가 웃어?' '장례 치르면서 웃어?' 이런 질문들은 생각해보면 이상하기 이를 데 없는 말입니다. 축제를 통해 참여한 시민들이 자긍심과 해방감을 경험하는 동시에 큰 사고를 목격한 시민으로서 슬픔을 느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판국에 무슨 저런 행사를?' 인디밴드 행사나 쿼어 퍼레이드를 두고 던져진 따가운 눈총입니다. 이런 반응들도 행사의 외양만 보고 선부른 판단을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반면 대한민국을 연호하고 애국가를 제창했던 '쿼어 퍼레이드 반대집회'에 대해서는 같은 비난이 쏟아지지 않았습니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행사의 외양을 중심으로 한 표면적 판단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피해 당사자와 이웃들의 감정에 충분한 예의를 갖추고 있느냐 아니냐의 여부가 아닐까요?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단식농성장 앞에서 일어난 폭식 행사는 '먹기'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 행사의 취지가 가진 '예의조차 없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 아닐까요? 한편으로, 한 사건을 대하면서 똑같은 무게의 감정 진동이나 같은 외양의 감정 표현만을 강요하는 것은 어쩌면 '각자 가장 적합한 방식의 애도'를 찾아내고 지속시키는 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 사회적 죽음은 사회적 애도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 많은 질문거리를 던지게 마련입니다. 전쟁이나 대형 재난사고의 경우처럼, 사회적 성격을 띤 죽음은 그 자체로 사회적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사회/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나 정체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공적'(公的)인 애도의 내용과 형식은 권력자가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 그 범위가 정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배세력이 상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은폐·축소하면서 이 사건을 애도할 만한 것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공적 애도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제대로 된 애도가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애도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식의 담론이 유포될 경우, 사회적 애도는 정치적으로 가로막힙니다. '세월호 사건은 교통사고와 같다.'는 얘기로 공적 애도의 대상에

서 제외해버리거나(교통사고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이제 그만 잊자.'는 얘기로 슬픔과 애도의 기간을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것은 타당할까요? 충분한 애도의 시기를 거쳤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형식적, 간접적 애도에 지친 이들의 호흡이 아니라, 크나큰 상실 속에서도 충분히 슬퍼하고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을 때라고 판단할 수 있는 피해 당사자들의 호흡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2-3) 누구의 어떤 애도가 위로가 될 수 있는가? : 서성이는 애도와 넘치는 애도 사이

✓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직면하는 고통에 대한 공감과 상실에 대한 애도를 누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위로가 될까요?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일은 중요하나,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할지 몰라, 과연 나의 위로가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나 있나 싶어 난처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크나큰 상실을 극복하고 살아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유사한 아픔을 겪은 이들의 이야기야말로 큰 위로가 될지도 모르지요. 그렇다고 이 사건을 함께 경험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다른 시민들의 자세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불어에서 굿판 혹은 푸닥거리를 의미하는 콩쥬라시옹(conjuration)은 상반된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유령을 불러내는 초혼(招魂)과 불러낸 유령을 쫓아내는 축귀(逐鬼). 재난사고를 함께 겪고 사건의 이후를 함께 경험하면서, 시민들은 어떤 푸닥거리를 준비해야 할까요? 흥미로운 점은 유령을 불러내는 주문이든, 쫓는 주문이든 푸닥거리에는 “함께(con-) 맹세하다(-juration)/ 모의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여럿이 모여 과거의 피해자를 불러냄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푸닥거리라는 것입니다. 시민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위로란 바로 이 ‘모의’에 함께하는 일 아닐까요?

✓ 사회적 애도의 흘러넘침과 앞지름이 어떤 의미에서 피해자와 가족을 주변으로 내모는 효과가 있지는 않나요? 반대로 성급한 애도의 거뒤틀림이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화하고 고립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지는 않나요? 일반 상갓집에서 유가족보다 더 목놓아 우는 조문객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지만, 세월호와 같은 사회적 사건의 경우에는 유가족이나 생존자를 향해 슬픔이나 미안함 등 ‘과잉’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간혹 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의견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애도의 정치적 방향이나 내용을 선점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만하면 충분했다.'며 애도를 선불리 철회하는 일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에 여전히 가닿지 못하고 있다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와 연대의 내용을 지속해서 고민하는 것이 시민들이 짊어져야 할 몫은 아닐까요?

2-4) 누가 애도할 수 있는가? 애도의 능력과 시간을 허락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가? : 애도로부터 회피하기/거리두기의 사회적 맥락

✓ ‘냉정한’ 애도는 불가능하고 또 비난의 대상이 되어도 괜찮은 걸까요? 애도의 온

**도는 몇 °C일까요?** 사회적 애도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직접 사고에 휘말렸고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린 피해 당사자들을 제외한 시민들에게는 사회적 애도 행위에 뛰어들지, 아니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지가 각자의 판단 몫으로 주어 집니다. 어떤 이들은 '나와 상관없다.', '관심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정말 상관 없다고 생각한 이들도 있을 겁니다. 반면, 동시대인으로서 자기의 삶이 이 사고에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지만, 실체를 알 수 없는 책임자를 욕하는 것 이외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거나, 감정에 압도될 경우 흔들릴 현재의 삶을 지켜내고자 '거리두기' 또는 '냉정한 애도'의 방식을 택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회적 애도는 삶의 기반이 있는 이들에게만 허락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압도적 사건과 감정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함으로써만 오늘의 삶을 버틸 수 있는 존재들을 그저 탓하기만 해도 괜찮은 걸까요?

✓ 나의 애도가 어설피고 야트막하여 피해자들에게 외려 누를 끼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혹은 나의 애도가 나도 언젠가 비슷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위태로운 자각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나를 향한 것은 아닌가 하는 성찰적 마음으로 거리 또는 냉정함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 조문 퍼포먼스 논란처럼, 위장된 애도는 더욱 큰 분노의 대상이 되니까요. '세월호 피로감'을 이야기하며 회피하는 사람 중에도 죄책감과 책임감을 경감시키기 위해 명분을 찾고 싶은 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선택의 올바름 여부를 떠나서, 사회적 맥락 속에서 거리두기 역시 슬픔의 또 다른 반응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냉정한 애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도 가능할지 모릅니다.

✓ 사회적 애도를 행하는 이들을 향해 따라붙는 사회적 차별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데 신경 끄고 공부나 해라.' 학생·청소년들이 주로 받은 압박입니다. 이는 또래가 다수 사망한 사고와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국가의 민낯을 바라보며 중고등학생들이 느낀 정서적 충격을 이해받으며 충분히 애도하고 성찰할 기회를 빼앗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분향소를 찾아온 이주노동자들이 받은 각별한 주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동료'로서가 아니라 그저 '국경을 넘는 추모 물결'이라는 수식을 빚낼 수단으로서만 환영받았던 것은 아닐까요? **누구의 어떤 애도는 환영받고, 누구의 어떤 애도는 제약되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 2-5) '~주의' 또는 사회적 각본에 따라 애도를 포장하지는 않는가? : 포섭된 애도

✓ 사회적 애도, 공적(公的) 애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특정 대상의 상실이 애도할 만하다는 사회적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실은 개인의 아픔으로 머무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애도의 공동체로부터 추방되기도 합니다. 무엇이 공적 애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사건을 무엇의 상실로 규정하느냐를 둘러싼 각축과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애도의 자격을 쉽게 승인받으려면 기존 사회가 강렬하게 떠받치고 있는 인식의 틀에 기대면 됩니다. 세월호 사고와 국가주의, 가족주의의 결합이 대표적입니다.



✓ 세월호 사고는 국가가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인식과 국가가 원래 그런 존재라는 인식 사이에는 커다란 격차가 있습니다. 국가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입장의 갈림길에 섭니다.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것은 국가였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두 가지 갈림길에 놓입니다. 사고 이후 재건되어야 할 것은 안전한 국가인가, 안전한 사회인가? 안전은 국가만이 보장해줄 수 있는가, 아니면 국가가 과연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인가? 저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가의 의무만 강조될 때, 시민이 국가의 보호를 받는 대상에만 머물 때, '안전할 권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가를 통제할 시민의 힘이 없는 한, 국가는 또 세월호 사고를 낳은 무책임과 부패를 고스란히 반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 '순수 유가족'이라는 표현처럼,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비정치적 시민'이 입은 피해만 사회적 애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은 또 어떤가요?** 이는 사람이 아닌 '국가의 위기'를 먼저 주목하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애도를 거두고 경제를 살릴 때'라는 인식 역시 국가주의에 포획된 알뜰한 애도의 결과물은 아니었나요?

✓ **피해를 당한 가족에 대해 말하면서 '단란하기 그지없던 가정이 한순간에 파괴됐다.', '제 목숨보다 귀한 자식을 잃었다.'**는 식의 정형화된 가족상을 들이대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에는 흔히 사회적 각본이 따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수용하고 싶기 때문일 수도 있고,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표현할 언어가 부족하기에 상투적 어법에 기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유가족들 역시 상실의 애절함이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못할까 두려워, '정상가족'의 상에서 벗어난 가족의 실제 모습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힘든 장벽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큰 피해를 입은 축산 농민들이 피해에 대한 공감을 얻기 위해 '내 자식처럼 키우던 가족을 잃었다.'고 말하곤 하지만, 실제 그 가족들의 사육 환경은 자녀를 키우는 환경과 같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물론 상실이 가져다주는 아픔을 견디기 위해 잃어버린 이와 의 아름다운 추억만을 기억하고 싶은 심리적 작용이 일어나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잃은 고통이 허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현실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동질적이지 않고, 아무 갈등 없는 단란한 가정이란 대개 존재하지 않는 허구입니다. 애증이 뒤섞인 관계였다고 해서 상실의 고통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복합적 고통을 수용하기보다 단편적 고통을 허구적으로 구성해버리곤 합니다. 재혼가정이나 이혼가정의 부모라 해서, 자녀와 울통불통 갈등의 과정을 겪고 있는 부모라 해서 자녀를 잃은 상실감이 적을 거란 추측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단란하기만 했던 가정이 아니더라도 가족을 잃은 각자의 고통을 헤아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일이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내세우는 것 또한 누군가에게는 모성과 부성의 내용과 수준을 강요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족을 잃은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일이 곧장 '가족이 제일 소중한다', '우리 가족부터 챙겨야겠다'는 식의 가족주의를 강화하는 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기울이는 일도 필요합니다.

✓ 이처럼 짜인 각본에 따라 애도를 포장하는 일은 바로 그 각본 때문에 애도의 진정성에 함부로 흠집이 가해질 수 있기에 위험합니다. 세월호 유가족 '유민 아빠' 김영오 씨에 대한 가족사 해집기 역시 애도의 자격에 흠집을 냄으로써 사회적 애도의 물결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파동을 겪으면서 각본에 따라 구성되어 완벽하고 단란하기만 한 '허구의 가족'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실제의 가족'의 겪은 상실에 대해서도 애도할 수 있는 품을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믿고 싶은 거짓, 감추고 싶은 진실의 각본'에 완벽히 부합하는 가족만이 애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회는 그 어떤 누구의 상실에도 애도할 수 없는 사회가 아닐까요?

### 3. 사건의 의미와 해결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 3-1) 누가 왜 무슨 일을 겪었는가? : 사고의 원인에 대한 성찰

✓ 우리는 어떤 사건을 겪었다고 의미화하고 기억해야 할까요? 대형 재난사고의 경우, 피해의 규모 자체가 워낙 압도적이어서 시민들에게 커다란 심리적 충격을 가져다줍니다. 그러다 보면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에만 집중하거나 반대로 자신이 받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끔찍한 사건으로부터 멀찌감치 물러앉으려는 경향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심리적 충격은 완화되더라도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시민의 책임이 있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터져나온 외침처럼, 사건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사고를 낳은 구조적 요인을 바로잡기 위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수백 명이 죽은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만으로는 사고의 의미를 제대로 기억할 수 없습니다. **누가, 왜, 무슨 일을 겪었나요?** 이 질문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재'(人災), 사람이 만들어낸 재앙이라는 말로는 사건의 의미를 정확히 포착하기 힘듭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었던 우연적 사고가 아니라 특정 집단,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집중된 필연적 사고가 아니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계급, 성별, 나이, 인종 등의 이유로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집단에 희생이 집중되는 이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월호 사고의 경우, 누가 세월호 같은 선박을 주로 이용하는가, 무리한 항해는 어떻게 가능했는가, 왜 학생 승객 중 압도적 다수가 살아남지 못했는가, 과적과 무리한 선박 개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단지 부정부패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방향이 사고를 낳은 구조에 공모하고 있지는 않은가 등과 같은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 사고 과정에서 무엇을 성찰해야 할까요? 세월호 사고 이후 사회 곳곳에서 저마다 사고의 원인을 살피는 성찰이 일어났습니다. 세월호 사고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자 자기의 애초 의제와 세월호를 무리하게 연결지어 주목받을 필요성을 강변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충격적 단면에만 집중하다 보면, 사고 원인에 대

한 총체적 분석을 놓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피해자의 다수가 학생이고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방송에 학생들이 따랐다는 사실에 주목해, 복종과 정답을 강요하는 한국교육의 문제점을 짚었던 일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고를 교육의 문제로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교육'의 변화를 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교육 자체를 세월호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과도한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생들이 세월호에 승선하지 않았더라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 '명령'해서 미안한 것인가요? '잘못된 명령'이라 미안한 것인가요? 세월호 사고 과정에서 선내에 방송된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사고 당시 스스로 생존을 모색하기 위해 묘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지, 구조 신호를 기다리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한 가지 답을 정해놓기는 힘듭니다. 사망자·실종자들을 향해 쏟아진 미안함의 정서는 '올바른 명령이 아니었다.'는 데서 연유합니다. 빨리 탈출하라는 지시가 있어야 했는데 선원이나 해경들이 탈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데서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미안해했습니다. 상황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보기 힘들다면, 주체적으로 생존을 모색하기 위해 집단 지성을 모으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에서는 이 과정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명령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누군가가 명령과 지시에 따라야만 되는 존재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요?

✓ 누가 책임으로부터 가장 멀리 달아나 있나요? 세월호 사건을 좇다 보면 구조과정에서 상부의 허가를 기다리다 긴박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과 분노가 커집니다. 또한, 선박 운행과 관련해 하청의 하청이 꼬리를 물고 얽혀 있고 정부가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이 구조를 만든 주범이라는 사실이 보입니다. "왜 대통령한테 그러느냐."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월호 사건을 낳은 원인을 총체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몇몇의 잘못을 숙아내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도 없고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도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대통령이 사건을 직접 모의하고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가의 수반을 중심으로 책임에 대한 통감과 재방 방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사건이 왜 일어났고, 누가 책임으로부터 가장 멀리 달아나 있는지에 대한 성찰을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사고 원인과 책임에 대한 규명을 최소화하려는 현 정국 아닐까요?

### 3-2) 사고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차별적 인식이 작용하진 않는가 : 잘못 겨냥된 화살

✓ 사고 자체의 규모가 클수록, 재난 현장에서 목격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준 충격이 크면 클수록 총체적 낙담에 빠지기 쉽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나, 무엇을 해야 하나 갈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낙담조차 할 수 없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을 보면 우리의 낙담이 선부른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부의 무능은 쉽게 탓하면서도 이 사고를 함께 겪는 나의 역할을 찾는 데는 게

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의 지혜를 모아 원인을 함께 찾고 잘못된 구조와 정치를 바로잡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시민의 의사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라는 요구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 그런데 자칫 차별적 인식에 기대어 사고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아버리면 외려 권력이나 구조의 책임을 가리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세월호 사고가 터진 직후에도 단지 선장이 노인이어서, 조타수가 여성이어서, 선원들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실력에 문제가 있어 사고가 났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노인이고 여성이어서 무능하다는 인식은 편견입니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사고가 터진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할 안전점검을 책임질 수 없었고, 화물 과적을 거부할 힘도 없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이처럼 사고의 원인을 **관련자들의 소수성에서 찾는 또 다른 차별이 일어나지 않는지 되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 3-3) 사건이 잘 ‘해결’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 해결의 의미

√ **사건이 잘 해결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어떤 이들은 이제 해결되었으니 그만 하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무엇 하나 해결된 게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해결’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결된 상태로 보느냐에 따라 종착지도, 종결의 시점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장과 선원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고 책임자인 유병언 회장까지 사망했으니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좁은 의미의 책임자 처벌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 피해자와 유가족의 치유와 회복, 진상규명, 부패의 구조에 연루된 모든 책임자에 대한 처벌, 사고를 낳은 사회의 재구성, 이 사고의 의미에 대한 기록까지를 해결이라고 보는 이들에게는 지금 해결은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진상규명의 범위와 정도도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무엇보다 진상규명은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유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해 필수적이기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조차 되지 않은 현 상황은 우리가 해결의 문턱에도 이르지 못했음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피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 당사자가 원하는 만큼 진실에 가까이 가는 것, 당사자의 입장에서 충분한 애도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요?

## 4. 언론과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재난사고에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는 피해자의 생존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유가족과 시민의 정서와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정부가 재빠르게 위기상황을 인정하고 국가 책임을 다할 때, 피해자도 유가족도 시민들도 사용될 자원에 대한 확신과 안전감을 느끼고 사고와 사고 이후의 삶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재난보도를 대하는 언론 역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진실을 파헤치며 정부가 혹여 찾지 못한 전문적 대안들을 찾아내는 파수꾼 구실을 수행할 수 있기에 중요합니다.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과 자원을 가진 정부와 언론이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감시와 견제가 필수적입니다.

#### 4-1) 정부는 재난현장과 피해자에 국가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 정부의 역할

✓ **재난현장에서 압도적 자원 동원력을 갖춘 국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체제를 갖추고 구조와 피해자 지원을 다 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은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유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세월호 사고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뒤늦게 꾸려지고 구조대가 뒤늦게 현장을 방문하고 비용을 쉼하느라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점은 피해 당사자는 물론 많은 시민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선원이나 선박회사에만 돌림으로써 구조적 문제를 은폐하려는 시도 역시 뒤따랐습니다.

✓ **끔찍한 사고와 돌이킬 수 없는 상실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는 일은 개인이 아닌 사회의 몫입니다.** 모든 시민이 이 책임에 동참해야 하겠지만, 특히 정부가 생존자나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였는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이 '진실'에 대한 규명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면 심리적 외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고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 자체가 고통을 강화하고 지속시키는 이유가 됩니다. 또한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정서적, 경제적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분향소 설치와 같은 '관제 추모'만으로 정부의 책임을 다한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나요?** 구조적 피해자에 대한 마땅한 지원을 '무임승차'나 '특혜'로 공격하는 일은 없었나요? 비전문적인 상담 인력이나 낙후된 자원이 함부로 유입되고 상담자가 자주 교체되어 오히려 피해자의 고통이나 무력감을 가중시키지는 않았나요? '괜찮다고 해야 상담이 끝나니 그냥 괜찮다고 했다.'는 유가족과 생존학생들의 증언은 무엇을 말해주나요? 심리 지원뿐 아니라 생활지원, 관계회복 지원 등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우리는 뼈아프게 새겨야 합니다. 유가족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자살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은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보여줍니다.

✓ **피해자와 유가족뿐 아니라 참사 현장에 투입된 구조인력이 겪은 심리적 충격과 피로도** 이루 말하기 힘듭니다. 구조작업에 투입됐던 민간 잠수사의 죽음, 구조작업을 끝내고 돌아오던 소방헬기의 추락으로 인한 죽음 등 한정된 인력으로 무리하게 구조작업에 계속 투입함으로써 **구조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계속 살펴보아야 합니다.

✓ 정부에만 맡겨두지 않고 사회 성원으로 이웃의 고통에 연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고 현장으로 달려온 시민들도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 전쟁이 나면 왕과 군사들이 먼저 도망가서 의병이 조직되었다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들은 정부의 공백을 그저 메우는 존재가 아니라, 국가가 결코 줄 수 없는 사회적 연대를 선물하고 피해자의 치유에 협력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의 선의야 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부가 전문성을 갖고 해야 할 일들을 자원봉사자에게 떠넘긴 측면도 있습니다. 게다가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민간 자원활동가들이 온갖 굵은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교통수단이나 잠자리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온 바 있습니다. **민간의 자발적 지원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 4-2) 정부가 진실을 통제하려 하진 않는가? : 진실의 통제

✓ **정부가 자신의 편이나 정부책임자의 잘못을 덮는 방편으로 진실을 통제하고 있지는 않나요?** 세월호 사고 발생 직후 '전원구조'라는 오보는 정확한 상황 파악도 하지 않은 채 '믿고 싶은 거짓 정보'를 전파함으로써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정부의 공식 브리핑 외에 언론에 대한 보도 통제가 있었다는 것도 알려졌습니다. 실제 구조작업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달리 제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는 사실도 뒤늦게서야 보도되었습니다. 사고 관련 전문가들의 언론 인터뷰도 통제되었습니다. 정부의 입을 통해 불확실한 정보와 거짓이 전파된 사건은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불신과 아무것도 알 수 없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무기력을 키울 뿐 아니라 무언가를 할 기회조차 놓치게 합니다.

✓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은 시민의 의혹을 사기에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정당한 의혹 제기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일어나지 않았나요?** 세월호 사고에서도 구조 당국에 대한 의혹 제기를 '명예훼손'으로 검거하는 일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해명으로 답해야 할 일을 형사처벌이란 겁박으로 답하고 있는 셈입니다.

#### 4-3) 정부가 시민의 정서를 통제하려 하진 않는가? : 여론의 통제

✓ **정부가 특정한 방식과 장소에서의 추모 행위로만 애도를 제한함으로써 시민의 정서를 통제하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나요?**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설치한 분향소의 위치, 분향소의 수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나요? 천안함 사고 분향소 수보다 세월호 사고 분향소 수가 크게 못 미치는 현실에는 사고 이후의 흐름을 특정 정치적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정부의 속내가 담겨있습니다. 세월호 이후 노동절 집회를 비롯해 여러 집회가 자발적으로 취소되거나 취소에 대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옥내 분향소 조문(관제 추모)은 허용하면서도, 옥외 집회를 통한 집합적 추모 행사는 제한하는 것은 사회적 애도의 자유로운 표출과 안전사회의 건설보다는 '정권 안보',

‘정권 안위’에 더 관심을 두기 때문은 아닐까요? 정부가 나서 추모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나, 애도와 치유를 빌미로 시민의 저항을 가로막는 것은 ‘가만히 있으라.’던 세월호 선내 방송을 정부가 되풀이하고 있는 셈입니다.

✓ **피해자에게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가 일어나지는 않았나요?**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사고의 책임을 축소하거나 유가족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민생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진실과 존엄, 안전을 경제와 대립시키는 구도는 피해자뿐 아니라 시민들의 억울한 희생을 또 다시 강요하는 일이 되지는 않을까요? 피해자에게 충분히 슬퍼할 권리, 애도할 권리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는 얼마나 참혹한가요?

#### 4-4) 실효성 있는 재난 대비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가? : 대책의 방향

✓ 정부의 역할에는 일어난 사고에 대한 수습뿐 아니라 비슷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재난안전대책의 밑그림을 충실히 마련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가 가장 먼저 내놓은 대책 가운데 하나는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였습니다. 위기상황에 적절한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은 필요한 일이나, 안전교육만이 우선될 경우 피해자의 대응 능력 부족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무려 5개월이 지나서야 나온 재난안전대책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참사의 현장에서 먼저 희생된 이들을 통해 우리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사회를 구성할 기회를 뼈아프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 기회를 걷어차고 있지는 않나요?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와 모색을 하고 있나요?**

#### 4-5) 언론은 어쩌다 '기레기'가 되는가? : 언론의 재난보도 원칙

✓ **재난현장에서 언론은 정확한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고 정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대안을 길러내야 할 각별한 책임을 다하고 있나요?** 재난현장에서 언론은 어떻게 신뢰를 잃게 되고 ‘기레기’(기자 쓰레기)라는 악명을 얻게 되나요? 세월호 사고 이후 언론은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와 보도 방향에 종속된 채 속도전과 미디어 경쟁 구도에만 열을 올릴 뿐, 재난사고를 대하는 기본적인 보도준칙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 **‘정확’보다 ‘신속’을 우선하는 속도경쟁이 있지 않았나요?** 시민의 관심이 집중된 재난사고가 일어날 경우 언론사들은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기 때문에 속도경쟁에 내몰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속하지만 사실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정보를 무작위로 쏟아내는 것은 유가족과 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민간 잠수사 ‘홍모 씨’가 잠수과정에서 식당칸 생존자와 이야기했다는 등의 인터뷰를 진

상조사도 없이 그대로 내보낸 방송도 속보와 특종에 열을 올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2차 심리적 외상을 입히는 태도가 있지 않았나요?**

재난 현장에서 감정적 위기 상황에 처한 피해 당사자들을 자극할 수 있는 보도는 피해야 마땅합니다. 유가족에게 지급될 보험금을 선불리 계산해 보도한다거나 생존 학생들에게 친구의 죽음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는다거나 작위적으로 장면을 연출하여 사진을 찍는다거나 하는 행위들은 2차 심리적 외상을 입히는 행위일 뿐입니다.

✓ **자극적인 장면으로 불안을 조장하거나 피해자와 가족의 프라이버시, 심리적 안정을 침해하진 않았나요?**

큰 재난 앞에서 피해 상황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개인들만 부각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내보내는 것만으로는 재난을 사회적으로 극복하기 힘듭니다. 재난의 원인과 현장 상황을 정확하고도 절제력 있게 전달하면서도, 그 정보가 이를 접한 시민들이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데 유용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사망자나 생존자, 가족의 프라이버시와 명예,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도 유념해야 합니다. 희생자의 사진을 공개한다거나 구조된 어린이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다거나 구조 소식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불안을 함부로 보도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꼭 필요했었는지, 또 다른 피해를 유발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재난대책본부의 일방적 발표내용만 받아쓰기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사고 대책을 주도하는 재난대책본부의 발표에 언론이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언론의 역할은 '받아쓰기'가 아니라 '새로운 진실의 발견'입니다. 세월호 사건에서도 나타난 바 있듯이, 대다수 언론은 구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던 시각에도 심야 구조작업 장면을 계속 내보냈습니다. 반면 탐사보도 전문의 비주류 언론들은 재난대책본부가 찾지 못한 다양한 자료와 새로운 진실을 발굴해냈습니다.

✓ **허위·과장·여론몰이 보도를 하지 않았나요?**

대형 재난사고 보도에서는 시민적 분노를 몇몇 사람에게 집중시킴으로써 '괴물'을 만들어내거나 반대로 '영웅'을 만들어내는 일이 허다합니다. 세월호 사건에서도 승객 구조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선장과 유병언 일가와 구원파에 대한 대대적 마녀사냥식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선장의 얼굴은 여과 없이 노출되었고, 유병언 일가의 개인사와 주변 인물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도 계속되었습니다. 반면 승객을 구조하다 목숨을 잃은 승무원과 교사들을 영웅시하고 정형화하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선악 구도를 갖는 보도는 책임을 괴물이 된 몇몇 '개인'에게만 돌려버리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유병언 씨의 죽음 이후 책임자가 사라졌다는 식의 정부 태도와 언론의 보도가 뒤를 이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때 '악의 제거'로 사건은 해결되었다는 담론이 유포되고 망각에 정당성이 부여됩니다.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남아있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공유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 **언론이 권력의 영향으로 인하여 진실을 훼손하거나 왜곡하진 않았나요?**



경영 여건상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에 영향을 받곤 합니다. 세월호 사고에서도 KBS 사장에 의한 보도통제 지시가 있었고 이는 정부의 압력 때문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민간 잠수사 주도로 구조활동이 이루어졌으나, 해경이 마치 구조를 주도하고 있다는 식의 왜곡된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검은 옷을 입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언론도 있었습니다. 언론이 경영 구조상 권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해서 권력에 대한 복종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